

# 민주 도당 “한덕수 탄핵은 사필귀정”

### “윤석열 내란은 아직 진행 중... 내란 세력에 대한 조속한 체포·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관련해 지난 27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수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내란 공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원 192명으로부터 받은 탄핵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로 기록될 한덕수 권한대행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인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의 절차적 하자 보충과 적극 가담, △내란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 정권 이양 시도,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내란 종식 의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호하고 대행한 한덕수를 탄핵했다”고 말하며, “내

란 주범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국무총리’ 한덕수에 게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내란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도 모자라, 한덕수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했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힘은 존재하지 않는 권한대행 직위를 주장하며 근거 없이 200석의 의결 정족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권이 정지됨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으로서 탄핵 의결 정족수 150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

을 전했다.”며, “한덕수의 거부권 남발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에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에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자행한 전대미문의 내란 계엄으로 민주적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태롭다.”고 말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부를 담은 한덕수의 담화문 발표 이후 원·달라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수호, 한국 경제 회복, 국정 안정이 핵심이다.”며, “이를 위해 윤석열 및 내란 잔당에 대한 신속한 수사 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의 한덕수 탄핵은 내란 잔당의 준동으로 버랑 끝으로 몰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

다.”며, “내란 세력 탄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 세력의 소요와 망동을 멈추기 위해 ‘현행법’ 윤석열과 한덕수의 신속한 체포와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덕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수사 없이는 그 일당들의 후속 음모로 인한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법치의 재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전북 도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주도·가담자들에게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완수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 야 6당 등 국회의원 192명이 참여해 투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과반수의 탄핵 동의를 아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192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만호 기자

## 집회 참여 도민들 “얼른 파면돼 혼란 사라지길”

### 윤석열퇴진전북운동, 올 마지막 주말 전북도민대회 개최 응원봉 들고 집회 참여 시민 위한 따뜻한 손길도 이어져

2024년의 마지막 주말인 지난 28일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촛불과 응원봉을 든 도민들이 거리로 나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28일 오후 4시 전북 전주시 전주객사 품패지관 앞,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인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는 이날도 어김없이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영하에 근접한 기온 속에서도 두꺼운 외투와 장갑으로 추위와 싸우며, “우리는 전북 도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주도·가담자들에게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완수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무대 앞열에 앉은 옛도보이는 학생들은 스케치북에 ‘세상 끝이 래서 편히 잘 수가 없다’ 내 몸이 문재나 나라가 문재다’ ‘나라가 이 꼴이라 아픈지도 모르겠다’와 같은 문구를 펼쳐냈다.

시민들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장윤정의 ‘잔재미’ 등의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중간중간 가사를 ‘윤석열 파면’ 등으로 바꿔

부르며 윤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여한 윤모(30대)씨는 “이 시국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 얼른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떨어져서 혼란한 지금 시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윤석열은 물론이고 정부나 여당이나 하나같이 참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니 기가 찬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 속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도 이어졌다.

도열 간지 천막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집회 참가자를 위해 차를 달여 이들에게 대접하고 있었다. 손팻말을 허리에 낀 채 차를 받아 간 이들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던 인사를 건넸다.

‘선결제’ 커피를 제공해준다는 얘기도 집회 무대에서 흘러나왔다. 한 시민이 인근 카페에서 커피 50잔을 미리 결제했으니 카페로 가 ‘코드명’을 부르면 시민들이 한 잔씩 무료로 커피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뉴스

## 민주 한병도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6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승표면 산수배수장 인근 배수로 준설 3억원 △익산천 준설 7억원 △합라산 자연휴양림 데크 설치 5억원 △하늘공원 리모델링 공사 및 주차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야간경관 조명 개선 3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위기 심화로 장마철 수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옹포면 산수배수장 인근 배수로 및 익산천 준설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라산 자연휴양림 데크 설치, 하늘공원 리모델링 공사 및 주차장 조성, 중앙체육공원 야간경관 조명 개선 등 생활형 SOC사업에도 16억원을 투입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이만호 기자



이수라장이 된 국회 본회의장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 고금리 불법사채·추심 근절 제도적 장치 마련

### 민주 윤준병 의원 발의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국회 통과 최고이자율 3배 이상 초과 시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국민의 목숨까지 앓아가는 고금리 불법사채와 추심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이자 추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불법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익 추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



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불법사채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해 성취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는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스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

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도록 개정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1월 홀로 6살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목숨까지 앓아가는 전 근대적인 행태가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빛더미 지옥에 빠진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질적인 불법추심과 과도한 이자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고금리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신속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삶을 피해하게 만드는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계속해서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민주 “정치 불확실성 줄여야 경제 안정”

###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민의 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것이 당이 존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변호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몸싸움까지 감행했다”며 “부끄러움이 라는 감정 상태를 묻기도 아깝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

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입장문을 보도자료라며 배포했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반국민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삼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 소멸위기 처한 지역 주민이 겪는 식품 접근성 문제 해결방안 모색

### 도의회 식품사막 해소 정책연구회 연구구역 최종보고회 식품사막 해결... 지역 개발 전략 연계 다각적 대안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대표 서ანი 의원)가 지난 27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식품사막 해소 정책 연구 구역의 최종보고회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은 신선식품과 같은 필수적인 식료품을 근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생기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구역은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가 맡아 도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들이 겪는 식품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위원을 맡은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송춘호 전북대학교 교수,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문수 농민신문 기자, 백영규 전북광역지활센터장, 김석길 도농치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정성이 김제시농어촌지원센터장, 박장석 도 사회복지정책과장, 오대수 도 축산물위생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최한별 교수는 발제에서 “식품사막 문제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인프라, 사회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다각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특히 지정토론에서 백영규 전북광역지활센터장의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지역광역지활센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발언이 큰 관심을 받았다. 백영규 센터장은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지활센터와의 연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서ანი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고 상위권에 속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사막 문제를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인프라, 사회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다각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이어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